
2022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2021

인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

목 차

I. 총괄 의견

II. 분야별 의견

I 총괄 의견

-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여건의 안정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운용이 필요함.
 - 지역경제 활력 보강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체 경쟁력 회복 지원과 산업 여건 지원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 소비심리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인천형 복지기준 설정과 저출산, 고령화, 아동 보육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사회 문제 대응이 필요함.

- 인천형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시 미래를 대비해야 하며, 도시 기본 기능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친환경 자원순환모델 구축을 통한 녹색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천형 수소 생태계 등 녹색산업 발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원도심 활성화, 교통안전 환경 조성과 같은 도시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이 지속되어야 함.
 - 시민 편의성·만족도가 높거나, 공공성을 유지에 필요한 사업들에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 상·하수도, 노후 지하철 교체, 수도권 매립지 관련 등 시민 편의와 직결된 사업
 - 도시 기본 기능을 위한 교통망 개선 사업 등
 -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설과 장비 투자를 강화해야 함.

- 시민의 다양한 참여 보장과 의견 수렴 활성화가 필요하며, 시정의 주민참여방식도 쉽게 누구나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202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민 참여 유도,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인식제고와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체계 고도화와 성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보완적 제도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 활성화 그리고 소통 확대 등의 실천적 활동을 통해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개선함을 제안함.

II 분야별 의견

기획행정분야

□ 요 지

- 인천시 핵심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홍보는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인천e음 카드 앱이나 개발 중인 인천e한눈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기획조정실은 인천시의 주요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여 시정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따라서 ICT 관련 부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 시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틀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의 견

○ 예산정책토론회 의견

- ① 더불어 마을 사업지부터 WIFI 설치 요청
- ②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항이라면 제안한 지역(수요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 ③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서도 가시성이 떨어짐, 시민들의 접근하기 편하도록 해주고, 알기 쉬운 예산서 같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음
- ④ 노인들의 정보화교육이 복지관 및 그 외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정규 코스로 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함이 바람직하며, 100세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료됨
- ⑤ 정보화교육이 학생들에게 너무 기본기만 중복되고 있음. 심화와 개인별 맞춤교육도 필요
- ⑥ 시민들이 입안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부서들이 협치 방식으로 지원하여 운영될 수 있는 시민주도 사회혁신 플랫폼이 필요. 지역사회에서의 문제가 인천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함. 집행부서 위주의 사업발안도 좋지만,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 등이 접목되게 하려면 시민들의 참여창구가 더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입안단계 부터 회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시민혁신 플랫폼 있어야 함
- ⑦ 시민들이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할 때 비용에 대한 증빙을 위해 에너지를 지나치게 쏟아야 함, 관련하여 생재정적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

- ⑧ 시민들이 다양하게 소통하고 연결하며 창업/사회로의 진입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샌드박스도 많아져야 함, 단순히 메이커플레이스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장(유무형의)이 만들어져야 하겠음
- ⑨ 참여예산의 경우, 일반 시민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도 있음,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과 욕구는 분명함. 초기 제안단계에서 전문 행정통역가(행정의 언어와 민간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미래엔 위원회의 역할로 확장하는 것도 한 방법)가 제안자의 욕구를 분명히 파악하고, 욕구가 반영되게 하기 위해 제안사업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 거기에 다양한 부서가 협치하여 협력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필요
- ⑩ 평생학습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시켜 줄 필요가 있음. 특히 인천e음 앱이 상당히 보편화 된 바, 그 안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학습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의 결과에 따른 적절한 인정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도 좋겠음

○ '22년도 주요사업 의견

- ① 광역(수도권)협조체계 도입 :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세 지자체가 공동발전 및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함.
- ② 인천형 뉴딜 홍보 강화 : 인천형 뉴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함. 인천형 뉴딜의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 ③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 관련 조례 제정 : 서울시, 경기도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에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심의가 부실 할 여지가 있다. 이에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함.
- ④ ICT관련 부서 운영시스템 마련 : 정보화담당과·데이터혁신과·스마트도시 담당과는 ICT관련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이며, 4차 산업시대에 그 역할이 확대될 것임. 따라서 세 부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 또는 담당자(조정관·협력관)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인천연구원에 ICT관련 조직이나, 전문 인력을 배치 할 필요가 있음
- ⑤ 평생교육기관 평가 및 홍보시스템 도입 : 수강자의 만족도 조사·실태조사 등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움. 각 기관들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 할 필요도 있음.

- ⑥ 인천영어마을 공모·위탁방식 개선 : 공모기간이 짧고(1개월) 응모 조건이 까다로워(원어민 교사, 시설 등 확보 단체만 신청 가능) 특정 업체가 독점해 교육서비스가 개선 될 여지를 차단 함. 관련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공모·위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⑦ 업무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마련 : 평생교육과 장학금 업무가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함.
- ⑧ 평생교육지원 강화 방안 마련 : 인천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한국 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한 평생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장학재단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대학위주의 장학 지원에서 다방면으로 변화를 모색 중 이라는 점 고려)
- ⑨ 가로 정비 및 개선사업 관련 업무 강화 및 전문화 : 인천시내 공공 노후 교통시설물, 무허가 입간판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및 잠재적 사고의 위험이 있음. 이를 정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업무강화 및 전문화가 필요함.
- ⑩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제도 홍보 강화 : 경제적 약자가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제도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함.
- ⑪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보안 의식이 매우 낮음. 정보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요즈음 보안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거나 보안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⑫ 인천시 제작 웹사이트 활성화 : 인천시에서 제작한 웹사이트 활성화를 위하여 접근성(홍보강화) 강화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함. 주기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웹사이트 업데이트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한 사업부서의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⑬ 빅데이터 활용 방안 강화 : 최근 버스노선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있음. 이는 관련 빅데이터 분석 등의 활용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인천시의 경우 빅데이터는 외부에 하청을 주어 데이터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아직 스마트도시와 교통버스에 연계하여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⑭ 인천e한눈에 사이트 활성화 : 인천e한눈에 사이트에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을 접목시켜 사업들에 대한 시각화 자료들을 통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 ⑮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원도심 지원 강화 : 스마트도시에 대한 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심에 먼저 도입된 스마트 도시 시범 사업을 보편화하여 원도심 지원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⑩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 분과위원회에서 ICT관련 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할 때 행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또한 분과위원회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임원과 행정과의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봄.
- ⑪ 친환경자동차 확대 정책 개선 :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대한 지원이 추진 중. 친환경의 차량구매 중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의 처분과 연계한 지원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함. 기존의 차량을 정리하고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지원해주며, 특히 연식 등 탄소배출이 많은 차량을 정리 할 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보다 환경 중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22년도 편성방향 의견

① 주민참여예산 일정

- 8월 초 일정(예산정책토론회와 과 제안사업 심사표 제출, 온 예산 스터디)이 한 주에 몰려 있다가 8월 하순 일정이 전무함 -> 체계적인 계획을 짜거나 일정의 유동적 변경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온 예산 스터디 일정이 현행보다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위원들이 관련 부서의 대략적인 업무 및 전략을 파악한 후 제안 사업들을 심사해야 함.

② 제안사업 심사표의 배점을 현행(1~10점)에서 제안(1~5점)으로 변경

- 점수표의 배점 간격이 커질수록 사업 심사에서의 연임 위원과 신임 위원과의 영향력이 달라짐
- 연임위원들이 회의 참석과 정보를 통해 영향력이 커야지 심사점수 자체의 편차는 동일해야 한다고 봄

③ 임원과 행정 간의 협력관계

- 임원선출을 포함해 임원과 행정 간의 협력관계를 체계화·명확화 해야 함

④ 사업 담당자들의 동기부여 결여나 고충 고려

- 제안 사업 관련 담당자들이 주민의 전문화 되지 않은 사업 전담 혹은 해당 사업 진행에 대한 당위성 결여로 인해 심사과정에서 사업화를 포기해 위원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심사 자체에 의문이 듦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보다는 담당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심사과정의 주를 이룸)
- 이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 모색과 함께 해당 담당자들을 보호할 방안도 필요 하다고 봄

경제산업분야

□ 요 지

- 2021년 일자리경제본부 총괄예산은 5,9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의 4.98%이며, 주요 정책 사업은 지역경제안정추진 2,190억원(인천e음 등), 복지농촌구현586억원(직불금 등), 고용정책 및 취업지원 223억원 (지역 맞춤형 지원 등), 첨단산업 육성 지원 150억 등임.

□ 의 견

○ '22년도 주요사업 및 편성방향 의견

① 일자리경제과

- 미래직업수요 변화에 따른 지원시스템 개편 필요
-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지역시민과 소통강화
- (토론자) 인천 경제의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하여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 수도권 중심의 규제 철폐, 기업중심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산업용지 공급 등의 방안이 필요

②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순환 경제체계를 만들기 위한 인천e음 플랫폼 적극 활용
-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개발
- (토론회의견) '경기도상권진흥원'과 같이 인천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재단 등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시민현장의견)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세밀한 정책 필요
- (토론자) '소상공인을 위한 119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③ 청년정책과

- 청년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다양화(주거, 노후준비, 자산형성 등)

④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 지역거점 확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필요
- (토론회의견)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기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불가하겠으나, 참여소득개념에 기초하여 '인천e음'을 활용할 방안 다각적 연구

⑤ 미래산업과

- 지역의 주요 기반 시설인 국제공항, 바다, 산업단지 등 지역의 특성을 살려 로봇산업, 인천형 미래 산업(예:바이오 헬스, 환경, 모빌리티 물류·교통, K-뷰티산업 등) 집중 육성

⑥ 투자창업과

- (토론회의견)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성과지원과 관련 지역대학과 산학단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하여 구상 필요

- ⑦ 농축산유통과
 - 도시농업, 건강한 먹거리 문제, 반려동물 등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사안에 대하여 특화 사업 진행 필요
 - 농축산유통과에서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은 경제·산업적 측면보다는 시민의 건강권 측면으로 접근 필요
(전담조직 일자리경제본부 → 건강체육국 이전)
 - (토론회의견) '동물복지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같이 사업명을 구체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시민현장의견) 동물복지를 위한 반려견 산책 공간 조성 및 반려견을 돌보는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교육 필요
 - (시민현장의견) 반려동물을 유기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기에 대책 마련 시급
 - (토론자)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농촌'을 실현코자 전문농업인 육성,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 등이 필요
- ⑧ 남촌·삼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시민현장의견) 도매시장의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주차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필요

도시건설분야

□ 요 지

-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을 위한 사회 각 다양한 분야의 주민의견 반영 요청

□ 의 견

○ '22년도 편성방향 의견

- ① 더불어 마을 조성사업 조속 추진
- ② 지속가능한 원도심에 대한 정의의 새로운 접근 방법 필요
- ③ 개항창조도시, 5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등 뉴딜사업추진 철저
- ④ 초보자전거 교실 운영 등 주민참여사업 추진 제안
- ⑤ 도시 경관 지원 사업 색채의 통일성 필요
- ⑥ 노후 전신주 및 전선 지하화 필요
- ⑦ 캠프마켓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홍보 요청
- ⑧ 용유지역 (인천공항) 비행기소음에 대한 방음 필요
- ⑨ 항공 정비단지 조속 추진 요망
- ⑩ 소규모 저층주거지 지원 확대 필요 등
- ⑪ 사유지 도로정비 요청
- ⑫ 소규모 저층주거지 지원 (옥상방수) 필요 등
- ⑬ 공감마을 집수리지원 요청
- ⑭ 소래습지생태공원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국가공원 지정을 위한 시흥시 협의 진행사항

환경녹지분야

□ 요 지

- 2022년 환경녹지분야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가지 목표 설정과 부서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부서별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의 견

○ '22년도 주요사업 의견

- 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대상구역 규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② 에너지 정책에 필요한 최신의 지표 설정이 중요하며 에너지 이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기구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
- ③ 업사이클 센터 등 재활용 선별사업을 확대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 인식 대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함.
- ④ 물순환 시민위원회 구성과 물순환 조례 제정 등으로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스마트 관리 및 적극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함.
- ⑤ 구도심과 신도심의 공원녹지 수혜 차별 해소가 필요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공원녹지 예산의 확충이 요구됨.

○ '22년도 편성방향 의견

- ① 환경 녹지분야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확충과 자원순환관리사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 환경실천 관련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문화 지원, 재활용품 회수기의 설치 확대 등 4개 사업이 제안되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함.
- ② 환경녹지 분과위원회에서는 일반시민 제안사업으로 우선순위에 오른 14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는 상이한 '산책로 강아지 배설물 수거통과 비닐장갑 비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과 '21년도 지속사업으로 추진된 1개 사업을 포함하여 최종 9개 사업을 최종 선정함.
- ③ 공원녹지 분야는 둘레길 표시판 개선, 문학산 입구 에어 컴프레서 설치, 중앙공원과 수인선 달맞이 조경 조성, 중앙공원 체육시설 보강 등 5개 사업 순이며 환경기후 분야는 인천 깃대종 알리기 사업과 환경교육한 마당 사업, 그리고 RE100 활동가 양성 등 3개 제안사업과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확충 지속사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 ④ '22년도 환경녹지분야 예산편성 (안) 은 이미 발표된 대로 부서별 주요 사업계획들이 사업의 중복이나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최근 환경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력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적이고 소그룹 활동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에 수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기를 희망함.

여성가족분야

□ 요 지

- 22년도 여성가족분야 주요정책 기본방향인 '성평등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맞게 각 부서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그동안의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사업별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의 견

○ '22년도 주요사업 의견

- ① 양성 평등 사회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계획 및 예산 확대
 -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한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및 사업 내용의 확대가 필요함,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성인지 의식 향상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함.
- ② 안심 보육 환경 조성
 - 안심 보육을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위한 추가 인력 지원, 특수보육 시설 확대, 보육 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함.
- ③ 인천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 시행
 - 인천형 산후조리원에 대한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지원 외 개인 부담 비용 축소 및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임신부 우선 지원 등을 의무화해 민간 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견인해야 함.
- ④ 방과 후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
 -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 센터 확충, 인천형 공립지역아동센터 확대 등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 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현황 대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대상과 인원이 너무 적어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 '22년도 편성방향 의견

- ① 인천시의 성평등 종합지수는 2019년 기준 76.7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중하위 수준임. 특히, 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의사결정, 복지, 안전, 가족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②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함.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 보육 시설, 다함께 돌봄 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형 방과 후 돌봄 기관 등 공공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함.
- ③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기관 종사자들의 부담감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음. 보육 교사 1인당 돌봄 아동 수 축소 및 인력 확충, 방과 후 돌봄 기관에 대한 보조교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부담감을 줄여나가야 함.
- ④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 진행되고 있으나, 조손 가정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가정 내 아동 지도와 학습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디지털 기기 대여, 온라인 학습 개발·연계 사업, 조손 가정에 대한 디지털 기기 교육 연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함.

소통행정분야

□ 요 지

- 소통협력관 부서들이 다루고 있는 정책은 시민관심과 참여욕구가 높은 분야들로 정책적 안정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가 갖추어 지는 게 필요해 보임.

□ 의 견

○ '22년도 편성방향 의견

- ① 주요 시정의 시민참여를 위해 단체(국민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협조체계 구축하고 있는데, 해당 의제에 맞게 계층, 분야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 ② 협치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과 정책이 미흡했었는데 최근 개선되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협치의 당사자를 민-관으로 볼 때 협치 활성화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민간 활성화에 치우쳐 있음. 상대적으로 협치의 주요 주체인 공무원의 협치 행정 구현의 책임 강화 및 체질 개선이 정책방향, 사업, 성과 관리에 포함되어야 함.
- ③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인천시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 등은 풀뿌리 주민 자치 강화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임. 국가와 인천시의 정책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제반 지원체계와 방안이 강화되고 현재는 광역과 기초 체계에 따른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데 지원 내용이 체계에 맞게 정립되어야 함.
- ④ 자원순환 정책은 인천의 도시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이는 데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음. 이를 확산하는 방법으로 뽀로로 등 시민 친화적 콘텐츠를 활용, sns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등은 시민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시장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함.

재난안전분야

□ 요 지

- 노후·재건축 등의 시설물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 관리 필요
- 재난안전교육을 구별·마을별로 사업 진행해서 주민들이 쉽게 체험하며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이제는 일상이 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다시 세워져야 함
-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최신 설비 확대가 필요하며, 초동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소통시스템 구축 필요
-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기획수사에 집중하는 것 필요하므로 예산과 인력이 충원되어야 함
- 재난·안전 관련 부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모색해야 함
- 예방·안전 교육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및 홍보 사업의 규모와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 사업 특성상 재난·안전 분야는 사업분야에 사후 대책에 대한 성과지표보다는 ‘예방·안전교육’의 비중이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성과지표의 특성화가 필요해 보임

□ 의 견

① 안전정책과

- 노후, 재건축 등의 시설물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 관리 필요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헬프미 사업을 확대 강화해야함
 - 기존의 신고 후 출동이 아니라 노후, 재건축 등 위험 시설물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인 관리 매뉴얼 필요
-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많은 홍보 필요
 - 시민안전보험 사업은 인천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유용한 사업인데 이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
 - 보장항목, 보장금액의 확대로 안전사고에 대해 피해에 좀 더 많은 인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필요
- 재난안전교육을 구별, 마을별로 사업 진행해서 주민들이 쉽게 체험하며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재난구호소 체험캠프 등의 사업들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홍보가 많이 부족
 - 인천시민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구별, 마을별 주민활동과 연계해서 진행 필요
 - 특히 재난구호소체험 캠프 사업은 내용에 비해 사업비가 너무 적고 소규모로 진행되어 아쉬움
 - ‘인천형 안전문화대학 운영사업’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추진해야 함

② 사회재난과

- 안전점검은 현장에서 전문가와 동반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문가와 동반해서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노후건물, 재건축현장 등의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관리 매뉴얼 필요
 - 노후건물, 재건축현장, 초고층 시설물들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붕괴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매뉴얼 필요
 - 다양한 사회재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재난훈련이 필요하고 관련한 행동매뉴얼도 정비 필요
- 인천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사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과 홍보 필요
 - 올바른 안전신문고 사용법을 교육 및 홍보하여 일상적 생활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난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③ 자연재난과

-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일상이 되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침수방지 시설 미설치 주택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 시급
 - 우수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전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들 존재함
 - 침수방지 시설이 34.6%에 불과하므로 1000세대가 넘는 미설치 주택에 대해 전면 전수조사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
- 재해예방이 주민들의 일상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설치 및 마을에서의 안전교육 필요
 - 체험방식의 안전교육은 일상의 상식으로 우리 생활문화에 들어와야 함
 - 마을에서 다양한 방식(구 · 동별 안전문화대학 등)으로 전개 필요
 - 그늘막, 쿨링포그 등의 재해예방시설이 군 · 구별로 골고루 설치 필요
 - 재난상황에 맞는 주민행동요령 홍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 필요

④ 재난상황과

- 재난상황에 잘하기 위해 각종 최신 설비 확대와 초동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소통시스템 구축 필요
- 재난상황에 대한 효율적 초동대응을 위해 원도심, 학교주변 등 취약 지역에 CCTV 확충 필요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조건)
- 재난상황에 초동대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ICT기반 스마트 재난 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시, 구, 소방서, 경찰 등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소통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함
- 최신기술을 활용해서 잠재적 위험 상황을 예측 · 분석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및 AI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 필요

⑤ 특별사법경찰과

-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기획수사에 집중하는 것 필요하므로 예산과 인력이 충원되어야 함
 - ‘특사경’의 활동범위가 광범위한데 기획수사에 집중 필요
(생계형 사안에 대한 단속보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먹거리 등분야 단속 집중)
 - ‘특사경’의 역할 및 업무가 계속 확대 되고 있는 상황임에 비해 정원이(23명) 너무 적으므로 인원 증원 필요

⑥ 비상대책과

- 민방위 교육, 훈련이 마을문제 해결 등의 사업과 연계 필요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훈련이나 민방위교육 활동 등이 위축되어 있지만 안전한 인천을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다양한 훈련 및 교육 방식을 찾아야 함
 - 민방위 교육 · 훈련이 다양한 의제(마을 문제 해결 등)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함
 - 민방위 대원들 물품에 화생방 방독면 외의 필요한 물품들을 추가해 보강해야 할 필요성 있음.

교통 분야

□ 요 지

- 교통 분과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다른 분과보다 많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비 사업이 많아 예산배정에서도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함. 이에 따라 다수의 분과회의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며, 회의 시에는 분과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함.
- '22년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환경 조성 강화, 친환경 저상 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이동편의 사업 확대,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버스노선 개편,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철도망 구축,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확대, 인천교통 공사 운영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합리적이 개선방안 강구,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사업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이 다양한 게 반영되어 편성되어야 함.

□ 의 견

○ '22년도 주요사업 의견

①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은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하며, 이용자 연령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등 실제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시민대상 교육 시행

- ②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
 -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10개 군구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③ 버스승차 알림장치 도입(무정차 방지시스템)
 - 배차간격이 길거나 노년층이 많이 사는 소외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추진
- ④ 아라뱃길 주위의 불법차량 주차문제
 - 경인 아라뱃길 지역은 인천의 대표 관광명소이며 카라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 및 단속을 통해 향후 인천시 내 관광지에 사업을 확대 가능하도록 시범 추진
- 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LED점멸등(바닥신호등)설치
 -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10개 군구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22년도 편성방향 의견

교통 분야는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최적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교통정책과)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정비 등 시민안전 교통 환경 조성
 -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홍보 및 교육 등 시민 교통안전교육 강화
- (버스정책과)
 - 버스승강장 개선, 승차 알림장치 도입 등 버스이용 시민편의 예산 확보
 - 빅데이터 기반 노선개편, 마을버스 활성화 등 시민밀착형 사업 적극 추진
 - 대중교통이 취약한 원도심 지역 안배 및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등 확대
- (철도과)
 - 수도권 3개 시, 도 협력체계 강화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철도망 구축
 -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
- (택시물류과)
 -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
 - 시민들의 택시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시민교육 확대
- (교통관리과)
 - 불법주차 단속,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대
- (교통정보운영과)
 - 스마트 횡단보도 등 시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 적극 추진
 -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정보 안내기 확대 등 시스템 운영 및 성능 개선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신호기 설치 사업 보완 등

복지보건 분야

□ 요 지

-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대내외적 정책여건에 맞게 복지도시 인천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함. 선별적인 복지정책에서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대상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에서 당사자의 권리로서의 정책, 대규모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과제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됨.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시행해 인천시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대되기를 기대.

□ 의 견

○ '22년도 주요사업 의견

① 복지국

-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인천시 사회 서비스원 운영 지원)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통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
- 사회복지시설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분야별 복지사업 발굴과 지원으로 틈새 없는 복지구현
-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어울려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
-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
- 민간자원 발굴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민간 복지기관 협력
-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운영,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 민간 일자리 연계, 장애인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 지속 추진
-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내실운영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인천 장애인복지 통합플랫폼 운영 개선
- 장애인 정도별 분류식 맞춤형 정보 지원을 위한 용역 실시, 비대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재활훈련 매뉴얼 등 게시)
- 수요자 중심 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가족 지원 사업 활성화
- 어르신 복지증진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
- 고령사회 대응 센터 운영 기능 강화로 노후 준비 복지수요 대응
- 취약계층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효드림 복지 카드 지원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지역 특화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노후 준비 지원
- 특성별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발굴로 실질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여가프로그램 개발
- 개방형 경로당 조성 및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 확대
- 생활밀착형 노인 돌봄 정책 추진 및 인권보호 강화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안심안부서비스 및 무료급식 지원 등 공공 돌봄 체계 강화
- 찾아가는 인권모니터링을 통한 노인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 친환경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온택트 장사문화 선도
- 인천가족공원 선진 장사시설 조성(3-2단계) 및 온라인성묘시스템 상시화
-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이해도 제고
-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복지정책 추진
- 지역복지문제는 지역주민이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확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분야별 복지사업 지속적 발굴과 지원으로 틈새 없는 복지구현
- 일자리 복지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한 미래 구현
-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틈새 없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자활사업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근로기회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대
-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훈보상 예우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추진을 통한 나라사랑 분위기 조성
- 보훈교류 협력사업 강화
- 인천보훈지청과 보훈선양 활성화 시책 공유, 보훈증진과 나눔기부 확산 사업 추진
- 호국보훈의 달 관련 자체 감사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인천보훈병원 방문을 통한 의료진 등 위문과 격려

② 건강체육국

-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의료격차 해소
- 인천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제2인천의료원 건립 추진
-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노후 병원선('99.6) 대체 건조
-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
- 365일 공공 심야약국 운영, 마약퇴치사업,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등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감독 수행
-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 신속·정확한 응급환자 대응시스템을 구축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 재난 전문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처, 시민의 생명을 보호
- 사전예방·관리로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실시로 감염자 조기발견 및 감염병 확산방지 기여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기능 강화로 안전청정도시 유지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체계 및 조기 감시체계 등 빈틈없는 감시시스템 운영
- 경쟁력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 첨단기술 융합으로 시민 맞춤형 체육환경 조성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스포츠산업 기반마련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발굴 등 「인천형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
- 체육시설의 확충 및 체계적 운영 관리로 시민만족도 제고
-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안정적 민간위탁 및 지속적 관리감독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 건강지표 관리 강화
- 흡연율, 비만율, 음주율 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및 사업 확대 추진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서비스 강화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심리지원 및 자살예방사업 확대 추진
- 인간존중 돌봄 기법 ‘휴머니튜드’의 단계별 도입 확대
- 시민이 공감하는 건강관리로 건강백세 실현
- 시민 공감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사각지대 없는 의료지원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치료율 제고
- 덜어먹기 실천 확산 등을 통한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
-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을 위한 물품지원, 교육, 홍보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운영을 통한 영업자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 제공
- 다양한 음식문화행사 개최 및 인천 ‘맛’ 발굴
- 인천의 다채로운 음식문화 발굴·체험·홍보를 통한 외식산업 활성화
- 대형프랜차이즈 업소 증가 및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배달음식 관리 및 식중독 예방 최선
- 배달음식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식중독 발생 억제를 위해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안전한 유통식품 환경 조성
- 시민 다소비식품 등의 수거검사 강화로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 식품안전 감시에 대한 소비자 참여 확대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
-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조성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시행(2018.4.19.)으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생용품의 유통 등 안전성 확보
- 공중위생업소 관리업종이 세분화·증가로 위생 안전관리와 숙박업, 이·미용업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22년도 편성방향 의견

①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복지도시 인천을 향한 비전 모색, 인천 복지기준선 실행력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 서비스원 운영 방향 모색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종합계획 수립, 장애 아동 및 가정에 대한 통합 지원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인프라 확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노인정책과)

- 효드림 복지카드에 대한 평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을 돌봄의 주체로 바라보는 돌봄 정책 설계, 디지털 교육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접근성 향상,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확대

- (생활보장과)

-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한 평가 및 확대 방안 마련, 노숙인의 자립 지원 확대

② 건강체육국

- (보건의료정책과)

-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 인천시 보건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인천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명확화, 외국인을 위한 세심한 의료 정책 확대

-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 전담병원 유치 및 설립,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 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산 확대

- (건강증진과)

- 인천시민 건강관리 강화,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 사업 확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 사업 확대

- (체육진흥과)

- 인천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동호회를 대상으로 한 대회 외 지역 주민,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마을체육대회 지원

문화관광 분야

□ 요 지

-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문화·관광 사업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함. 문화예술 전 분야에 대한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인천 고유의 관광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인천시 특화 관광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함.

□ 의 견

○ '22년도 주요사업 의견

- ① '예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절차, 지원방식, 홍보방안 등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② '인천 뮤지엄 파크'를 성공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미술품 전시계획을 구체화하고 소장품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확대 추진이 필요함
- ③ '시 등록문화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철저히 보존·관리해야 하며, 공간 재조성 등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함
- ④ '작은 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는 바람직하나 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⑤ '관광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천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웰니스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⑥ '인천MICE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천형 마이스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22년도 편성방향 의견

- ①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인천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함
- ② 지역 및 시민 중심의 문화콘텐츠를 육성해야 하며,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등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개발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함
- ③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시민이 체험·향유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함
- ④ 도서관 건립 지원, 장서 확충, 스마트 도서관 확대 등 시민의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하고 독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함
- ⑤ 인천시만의 특화 관광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R&D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언택트 관광 상품을 발굴·육성해야 함
- ⑥ 자족형 마이스 생태계 구축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미래형 지역특화 전시회·이벤트를 발굴해야 함

해양항공 분야

□ 요 지

- 해양항공국의 사업에 대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함. 인천이 해양항공 도시이지만, 오히려 인천시민은 이를 인식 하지 못하고 있음. 시민이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천이 해양항공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정책을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함.
- 해양항공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천시민과 인천 사업체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
- 수산분야는 시민들의 먹거리 및 생업과 관련한 분야로서 시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에 대비한 대책 사업 발굴도 필요함

□ 의 견

○ '22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① 해양항만과

- 해양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크루즈관광 유치 마케팅 지원, 인천항 노후화 지원 사업 등 경쟁력 강화 필요
- 『인천국제해양포럼』 프로그램의 개선 및 시민접근성 향상 필요

② 항공과

-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체감효과 도모(토론회 제안)
 - 피해지역 주민과 공항·시·구의 긴밀히 소통 필요. 공항소음지역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시급함
- 인천의 해상, 영공 등 군사적 전략 방공망을 활용해 항공 산업의 네트워크를 체계적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토론회 제안)
- 젊은이들을 위한 공항도시(영종) 인프라 지원 강화(토론회 제안)
- 인천시의 보다 더 전문적인 인력 양성 사업 지원 필요
 - 항공 선도 기업 육성 양성 인력을 점진적 확대하고, 선도 기업 지정·육성을 지속 추진해야 함
- 인천시가 항공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함
 - 인천 내 드론이나 항공업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개선점이 있음
 - 전반적으로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함, 창업아카데미의 경우, 청소년들을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및 창업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지원해야 함.
- 항공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시의 적극지원과 예산 증액이 필요함
- 백령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필요함

③ 도서지원과

- 섬의 문화 콘텐츠 개발 · 홍보를 위한 정책 마련(토론회 제안)
- 해양쓰레기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토론회 제안), 또한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계획과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정책적 목표를 갖고 구체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함
- 쓰레기 수거 보상과 함께 어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어민 교육 사업 필요함. 또한, 타 광역시·도(서울, 경기, 강원 등) 간 협력을 이끌어 쓰레기 유입을 막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함.
- 인천의 아름다운 갯벌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토론회 제안)
- 해양쓰레기 수거(필터링)과정의 안전성 제고(토론회 제안)
- 지역 특성화 사업의 인력 육성 방안 필요
- 섬에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거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부서 추진사업에 포함시켜야 함.
- 삼목선착장 이용에 대해 개선 필요
- 매표소 업체가 이원화되어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 필요. 또한, 섬 불거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주변정리를 할 필요가 있음

④ 해양친수과

- 생태적 요소가 성과 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친수도시 조성 시 시민의 편의와 함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 해양 친수 공간 조성이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양 친수 공간 조성 및 해안철책 철거 사업도 필요하지만, 그 혜택 및 시민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기후위기를 고려하여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해야 함
- 친환경적인 친수 공간 조성이 되어야 함
- 친환경적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갯벌 살리기와 연계하여 시민이 쉽게 접근하며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그에 따라 어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⑤ 수산과

- 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시설 관련 인프라 조성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수산물 판로 개척 등 어촌 지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함
- 인공어초를 통한 수산 증식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수산자원 고갈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지원 사업도 필요함

⑥ 수산자원연구소

- 수산물 안전검사 정책의 신뢰 구축 및 홍보 필요(토론회 제안)
 - 수산물 안전관리검사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검사 관리가 정착되어야 함. 지속적 검사가 필요하며 시민들께서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함
-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며, 인공어초 조성은 일종의 바다 살리기 역할을 하므로 고무적인 사업임.
 - 어류 양식은 어자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므로 지속 추진해야 함
- 수산자원 연구 R&D 예산은 유지되어야 함

⑦ 수산기술지원센터

- 방류 후 모니터링 등의 후속조치 지속 필요
 - 수산종자 관리와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필요한 사업임
 - 치어 방류 등의 사업은 지속성이 중요하며 그 효과나 개선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기후 변화에 따른 어종 변화 연구가 필요함
 - 수온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에 대한 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IFEZ 분야

□ 요 지

- 경제청 내 기업시민의 참여예산 확대 및 사회공헌 협업 참여 독려
- 경제자유구역청 정보공개 및 대규모사업 추진과정 주민 공감대 형성

□ 의 견

○ '22년도 주요사업 의견

- ① 은골공원 산책로 조성 사업(운서역 2번 출구 H-5일원 꽃동산 조성)은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 산책로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제안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주무관의 적극적 업무 추진한 우수한 제안사업임
- ② 바닥, 스마트 신호등 설치 사업은 기설치 횡단보도의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고도화 과정을 통해 우수실행사업임을 감안하여 ifez지역 확대설치로 확정 되어 참여예산제도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전개로 환영함.
- ③ 송도 블루그린웨이 기본설계 용역 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용역 진행 등 재검토 필요한 상황임에도 다수 주민제안사업임을 감안하여 녹도사업 추진위한 기본용역부터 추진함.

○ '22년도 편성방향 의견

- ① ESG경영 트렌드 반영 및 스마트시티 사업과 시민홍보 추진 확대
- ② 위드 코로나 시대 대응 주민행복 힐링 프로그램 및 관광정책 개발
- ③ 경제청 내 기업시민의 참여예산 확대 및 사회공헌 협업 참여 독려
- ④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분과) 내 참여예산사업 제안건수 증대 위한 주민참여홍보확대와 제도 개선
- ⑤ 경제자유구역청 정보공개 및 대규모사업 추진과정 주민 공감대 형성
- ⑥ 주민제안 및 의견서 제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의무화 프로세스 반영으로 주민소통 강화
- ⑦ 분과 사업과 타 분과간의 통합적 사업제안 및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발휘